

빨리, 우리의 환경 바로 오염의 국제분쟁에 대비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는 지금, <오존층 소멸> <온실효과> <산성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경적 위기에 의한 重病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人類를 비롯한 3천 만種의 각종 생물도 共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자세 그리고 국민의 인식에 이르기 까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도 갖지 못해, 전국토가 오염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음은 매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국가 준비상 사태를 유발한 낙동강 폐놀 유출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만에 다시, 그 기업이 똑 같이 낙동강 폐놀을 유출한 이런 어기찬 현실은 우리가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안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자연과 환경의 질도 확보하지 못하면 인간성 상실, 사회질서의 붕괴를 자초해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뿐만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의한 국제분쟁 시대에 우리나라를 스스로 희생 양으로 자청해 바치게 된다.

지금, 세계는 확대되고 있는 지구 환경오염과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의한 국제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의 환경보호에 앞장 섰은 물론, 타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국가 이기주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는 시급한 당면 과제인데, 그 현실을 살펴 본다.

현재, 지구의 환경오염증에서 심각한 위협은 다음과 같다.

*CFCS, 할론 기타 人造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 오존층의 소멸은 인류에게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생존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보다 25%나 늘어나 있고, 매년 0.5%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이 온실효과를 방지하지 못하면 21세기 초반에는 海面이 상승해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물론, 모든 생물의 생존 터전인 유용한 토지가 수몰됨으로서 생물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 받을 것이다.

*수질오염과 자연수의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중동, 그리고 소련남부가 심각하며, 이미 河床이 낮아지고 있다.

*表土가 유실되고 있다. 1년에 2천만t의 양곡을 생산할 후진국 농민 9천만명이 농사지를 흩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삼림의 급멸은 홍수와 토양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고온화의 원인이며, 특히 삼림연소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실효과를 촉진시키고 있다.

*유조선과 유정의 사고로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오염과 각종 쓰레기로 이제 바다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의 악화, 특히 삼림의 훼손은 매일 같이 약 1백종의 생물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켜 생태계 균형을 깨고 있다.

*비료 농약 및 대량의 관개시설을 요하는 농업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고 기술집약

잡아, 해야 한다!

적 농업은 더욱 파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기 2010년까지는 서울을 포함하여 세계 30개 도시가 인구 2천만 내지 3천만명의 거대도시가 될 것이다. 이는 공동체 성격을 상실하고 관리 불가능한 도시로 될 것이다.

*인구는 매년 9천5백만명씩 늘어 서기 2025년에 85억, 서기 2050년에는 1백억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지구의 제한된 환경용량으로 평가할 때 최소한의 생존도 어렵게 하는 인구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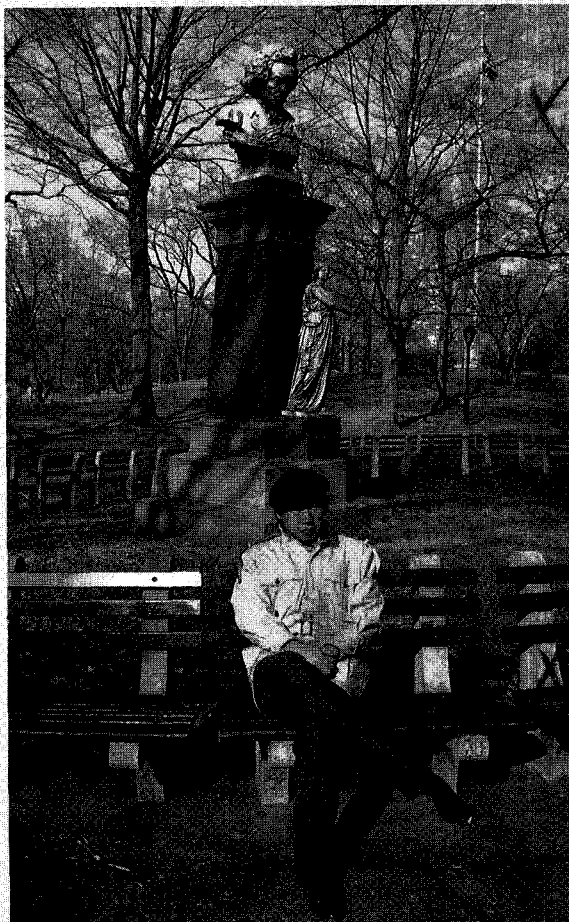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구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확대되자, 세계는 단 하나뿐인 지구를 오염으로부터 구출해 내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지구 환경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구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1972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유엔인간환경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태동된 <유엔환경계획(UNEP)>은 77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오존층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오존층 보호에 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국제환경협약이 맨 먼저 가시화 됐다.

85년 빈협약을 채택,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한 UNEP는 90년 6월 런던에서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는 남극의 오존 구멍을 재생시킬 수 없다고 보고, 92년부터 CFCS 생산을 줄여 2000년엔 그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할론 등도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개정했다.

그로 인해 다급해진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



▲ 뉴욕·센트럴파크의 베토벤 동상 앞에서의 필자

“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자연과 환경의 질도
확보하지 못하면 인간성 상실,
사회질서의 붕괴를 자초해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의한 국제분쟁시대에
우리나라를 스스로 희생 양으로
자칭해 바치게 된다.
”



지난 3월 4일부터 열흘간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렸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 제1차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미국이 배포한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로 나타나 공해강국으로 부상되었으며, 기후변화 협약협상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홍공업국들이다. 선진국들이 몬트리올 의정서 미가입국에 대해 관련 제품의 무역규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CFCs를 냉매(冷媒)로 쓰는 자동차와 냉장고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오존층 보호에 못지않게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지구온난화 방지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국제협약(IPCC)> 역시 UNEP 주도로 탄생했다.

UNEP는 에너지 사용에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서기 2030년쯤엔 해수면이 20cm 이상 높아지고 각종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이라며, 석탄 및 석유의 소비를 85년 기준으로 50% 감소시키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92년 까지 체결키로 했다.

이외에도 UNEP는 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협약>을 체결 90년대 중반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간 폐기물 이동을 억제하고 바젤협약 미가입국과의 교역을 금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열대림 보호대책도 추진중이다.

특히 유엔은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해 92년 브라질에서 <세계환경회의(UNCED)>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에서는 늘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진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을 국가별로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전자제품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별 사용 허용량의 규모이다. 선진국의 경우 86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제3세계 국가들은 1인당 0.5kg까지 허용한다는 것인데 후진국들은 크게 규제하고 프레온가스 배출의 “주범”인 선진국들엔 여전히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선진국들의 독점적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인도를 앞세운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구환경을 파괴해 놓고 이제와서 후진국들과 책임을 공유하자고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이라는 지고한 문제조차 국가간의 힘의 논리에 압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현실이다.

따라서, 오염의 확대로 환경문제에 의한 국제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숲과 호수가 인접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공업화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으로 산성비와 산성눈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와 캐나다의 광활한 숲이 미국의 대기오염 물질로 황폐화한 경우 등이 그 좋은 예다.

특히, 지난 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 사고로 스웨덴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에 까지 방사능을 옮기고 있으며, 최근의 걸프전쟁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의 광대한 이동과 원유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에 따른 영향 등은 국가간에 심각한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국가간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이런 오염물질의 월경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국가간에 첨예한 분쟁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예로 미국 동부 공업지대의 오염물질 때문에 생긴 산성비가 캐나다 동남지역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캐나다의 주장에 대해 미국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체르노빌 사고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던 스웨덴이 4년여 동안 집요하게 보상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련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급격히 공업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물질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이 87년부터 3년간 기류 이동을 분석한 결과, 상승기류가 서쪽이나 북서쪽에서 불어 올 경우, 중국 산둥성(山東省)등에 들어선 공장들이 내뿜는 매연가스들이 섞여 날아와 빗속의 pH가 그렇지 않을때 보다 최고 1.7이 낮은 4.5~5.3의 산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의 외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논란이 비화될 것이다.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의 환경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에 앞서, 자국의 환경보호 수립이 1차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분쟁의 기본 불씨라고 할 수 있는 산성비에 관한 기초 정보조차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구 환경오염과 국제환경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87년부터 한-미 환경심포지움을 연데 이어 88년과 90년에는 우리나라 환경처와 일본환경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환경과학회의를 개최, 지역 환경보전 대책을 논의했다.

또, 환경처는 금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일 환경회의에는 소련은 물론 중국의 전문가들도 초청, 동북 아시아지역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일련의 회의에 앞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환경이 수준급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보호 우선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공해 강국이라는 지탄(지난 3월 4일부터 열흘간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렸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 제1차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미국이 배포한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로 나타나 공해강국으로 부상되었으며, 기후변화 협약협상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환경문제만은 환경처 차원의 대책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층 소멸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구조조정과 대체물질 개발투자 계획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筆者: 本會 顧問/UNEP 글로벌 500 委員)